

원저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본 북한: 핵보유국 지위 추구와 대러 접근을 중심으로

전민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전민관 (jeonmk10@naver.com)

요약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다. 또한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하고 고체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로, 대한민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협력을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세 가지 틀(신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1) 북한의 최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2)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3) 군사력 과시를 위해 대남 핵 강압과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맹목적 유화 정책이나 과잉 대응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 한미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국방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충분한 힘의 우위를 인식시키면서 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바꿔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핵심어

북한, 현실주의 이론, 핵보유국 지위, 대러 접근, 군사력 과시

차례

1. 들어가는 글
2.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 2.1. 국제 무정부 상태와 세력균형의 원리
 - 2.2.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 억제 전략과 위협 대응
3.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 3.1. 국내 정치적 제약과 대외 편승 전략
 - 3.2.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현상변경 추구
4.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 4.1. 국가 간 권력 투쟁과 권위제고 정책
 - 4.2.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국제적 인정 노력
5. 나오는 글

Open Access

접수일: 2025년 02월 12일
수정일: 2025년 03월 03일
게재승인일: 2025년 03월 17일
출판일: 2025년 03월 31일

Copyright: © 2025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CC BY 4.0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

North Korea from a Real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ursuit of Nuclear-Weapons State Status and Strategic Engagement with Russia

Min Kwan Jeon

Ph.D. Candidate in Defense Industrial Security,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Min Kwan Jeon (jeonmk10@naver.com)

ABSTRACT

In 2024, North Korea formed a de facto military alliance with Russia and deployed combat troops to the Ukrainian battlefield. Additionally, it revealed HEU facilities and launched a solid-fuel ICBM, demonstrating its advanc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se events symbolize shifts in the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and pose a threat to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its strategic engagement with Russia through the lens of three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neorealism, neoclassical realism, and classical realism. The findings indicate that (1) while North Korea's ultimate intentions remain ambiguous, (2) its immediate priority is to pursue its status as a nuclear-weapon state with Russian support, and (3) it is likely to engage in nuclear coercion and localized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o display its military capabilities. Consequently, this study warns against both uncritical appeasement and overreaction to North Korea. It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y to ensure that North Korea perceives South Korea's military superiority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diplomatic efforts.

KEYWORDS

North Korea,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uclear-weapon state status, strategic engagement with Russia, display of military force

1. 들어가는 글

2024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으며(연합뉴스 2024/06/19), 곧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음도 사실상 시인했다(연합뉴스 2024/10/25).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발발과 북한의 무기 지원으로 시작된 북러 간 밀착이 냉전 시대의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 능력을 한계 없이 늘려가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은은 9.9절 기념연설 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연합뉴스 2024/09/10). 그리고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최종완결판이라며 고체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되는 최대 크기의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연합뉴스 2024/11/01).

현재 북한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사실상 9번째 핵무장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NPT라는 국제 비확산 체제하에서 당장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피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다가와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유럽·중동에서의 무력 충돌과 같은 유동적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실존적 문제가 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보일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역량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가장 열중해 온 핵무기 개발의 동인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힘의 균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대북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한미로부터의 안전 확보 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대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공격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끊임없이 무력증강과 한미이간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점이란 복잡다단하고 역동적인 현상을 단순화해서 바라보기 위한 일련의 가설들을 전제하는 것으로, 현실주의는 국가를 유일한 주요 행위자로 삼아 권력관계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치의 가장 대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영 2021, 17-32).

국제사회의 무정부성(anarchy)과 자조(self-help)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의 관점은 당장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 관점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북한이 추구하는 방향을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으로 나누고(황지환 2020), 실제 드러나는 대외 행동을 균형과 편승 전략으로 대비하여(안경모 2016; 2023) 설명한 것들이 있다. 북한의 예상 행보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정성윤·김민성 2023)이나 무력통일 시도(김진하 2022)를 주목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었다.

다만, 그동안 연구들이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각자의 논리에서 분석하다 보니 일정한 학문적 동의 위에서 논의를 더 진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 글의 목적은 연구자들이 이미 공유한다고 믿는 현실주의의 주요 이론들을 해체해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새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균형적인 관점을 갖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결과적으로는 (1) 북한의 최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2)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3) 군사력 과시를 위해 대남 핵 강압과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제 구조 중심의 신현실주의(neorealism) 이론을 통해 북한을 세력균형을 위해 무력을 추구하는 국가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내 변수까지 고려한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이론으로 살펴 북한을 정권유지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국가라는 행위자를 중요시했던 과거의 고전적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 이론으로 돌아가 북한을 권력투쟁을 위해 권위를 제고하는 국가로 이해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세 가지 이론적 틀을 종합 적용해 본 북한의 예상 행보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2.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2.1. 국제 무정부 상태와 세력균형의 원리

신현실주의 이론은 월츠(Kenneth Waltz)가 국제정치 체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월츠는 각 국가의 의도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는 초기 현실주의 이론의 시도를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통한 설명과 예측은 되풀이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행위자들의 태도와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폭넓은 다양성을 고려하는 바람에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결과들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Waltz 2010, 67). 체계적으로 접근하되 최대한 이론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개별 단위들에 영향을 가하면서도 분리되어 존재하는 정치적 구조를 개념화해서 인식해야 함을 강조했다(Waltz 2010, 79).

국제정치적 구조는 체계 안에서 단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다. 질서 유지자가 없으며 국가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따라서 국가들은 위계 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능력의 과소에 따라 구별되며 그 크기에 따라 관계를 맺는다. 이는 강대국 수에 따라 체계가 구분되며 강대국들의 상대적 힘이 변화될 때 체계가 변동됨을 의미한다(Waltz 2010, 88-101).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은 무정부적 구조하에서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된다. 이 이론은 국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제들로부터 비롯된다. 국가는 단일주체로서 작게는 자기 보존을, 크게는 세계 지배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 수단은 대내적 노력과 대외적 노력으로 나뉘며, 대내적 노력이란 군사력의 증대를 의미하고 대외적 노력이란 동맹의 강화를 뜻한다(Waltz 2010, 118).

중요한 것은 세력균형 이론의 설명 대상이 국가들의 조정되지 않은 행위가 가져오는 국제적 결과라는 점이다. 국가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약들을 설명하여 국가들의 행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단서를 제공할 뿐, 이 이론 자체가 국가들의 구체 행위 모두를 설명하지는 못한다(Waltz 2010, 122). 일정한 시점에 개별 국가들의 국내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반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외교정책 이론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력균형 이론의 경우 국가들은 주로 균형(balancing)을 형성하려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패자에게도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패배가 곧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자의 편승(bandwagoning)이 특징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생존 자체가 중요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균형을 이루려는 행위가 현명하다. 더 강한 국가와 연합을 이루어 승리했을 경우 그 강대국에게 복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도 가급적이면 더 약한 쪽을 선택한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강한 쪽이기 때문이다(Waltz 2010, 125-127).

또한 대부분 국가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 정책과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려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원의 동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방부문 지출을 늘리는 대신 동맹 맺기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며, 다른 국가와의 동맹으로 인한 자율성 축소가 염려될 경우에는 자강의 방법으로 안보 증진을 추구하게 된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경우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강대국들의 공격적 측면을 강조하며 몇 가지 가설을 보충했다. 스스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고 부른 이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대국들은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상대적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Mearsheimer 2014, 30-34). 둘째, 강대국들이 언제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데, 세력 균형 상태와 자신의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희생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면 기존 상태를 지속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Mearsheimer 2014, 37). 셋째,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세계의 바다를 가로질러 군사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지역 패권을 갖는 것이다(Mearsheimer 2014, 40-42).

이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들의 경쟁은 주로 군사력에 의해 판가름 된다. 핵시대에서 강대국은 반드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하며, 일단 핵보복 능력을 확보한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정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육군이 군사력의 핵심이다(Mearsheimer 2014, 128-133). 이와 관련하여 강대국은 자신이 속한 대륙에서의 지배 국가(dominant power)를 지향하는 동시에, 바다 건너 다른 대륙에 대해서는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가 되어 또 다른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출현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Mearsheimer 2014, 141).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대륙적 강대국이다(Mearsheimer 2014, 135).

한편, 미어샤이머 역시 편승보다는 균형이 적국에 대한 생산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국가들은 책임전가(buck-passing)를 더 선호한다고 지적한다(Mearsheimer 2014, 139-140). 자국이 포함된 동맹세력의 약화 또는 책임을 떠맡게 될 나라의 힘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자국의 피해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Mearsheimer 2014, 159-162). 이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균형이나 책임전가라는 전략적 행위를 통해 어떻게든 위협을 통제하고 생존하기 위해 애쓴다.

2.2.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 억제 전략과 위협 대응

많은 관찰자들이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신현실주의 이론이 설명하는 틀에서 보면 북한 역시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일반적인 국가 행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ang 1995, 253).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핵무기 개발의 동기 역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한 내적균형 정책, 즉 생존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냉전 기간에도 남북한 간 경제력·군사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안보 위협이 커졌을 북한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에 이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 그리고 소련의 해체(1991.12)는 가장 큰 체제 위기였다. 냉전의 종식, 즉 미·소 양극(bipolarity) 체계에서 미국의 단극(unipolarity) 체계로의 구조 변화는 북한의 생존 조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대한 변동이었다. 특

히, 한미동맹 유지 속 한소수교(1990.9)와 한중수교(1992.8)로 대표되는 한국의 적극적 북방정책은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간 구도로 겨우 이어져 오던 한반도 세력균형을 깨뜨렸다. 사회주의 중중국 소련이 무너지던 해, 떠밀리듯이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1991.12)한 것은 당시 북한의 곤궁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Oberdorfer 2014, 394-400).

1990년 9월 김영남 외교부장은 한소수교 직전 북한을 방문한 소련 외무장관을 만나 핵무기 개발을 예고했다. “소련이 남조선 승인 시 남조선은 동독의 상황을 본떠 북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더 분투할 것이다. 이는 북소 안보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우리는 더 이상 정책을 수립하면서 소련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희망하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Oberdorfer 2014, 331-332). 그동안 북한은 소련과의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원조받는 대신 NPT에 가입(1985.12)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제지당해 왔는데(이용준 2018, 43-51), 이처럼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내부균형 정책 선언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2002.1)한 가운데 이라크를 실제로 공격(2003.3)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보인 반응에서도 그대로 읽힌다. “국제여론도, 유엔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라면서 한미 억제를 위한 자위적 핵보유 필요성을 강변한 것이다(이종주 2018, 93).

한편, 중국의 부상 역시 북한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었다. 사실 1970년대 미중 데탕트 시점부터 이미 북중 관계는 제지동맹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공동의 적과 함께 싸우는 혈맹이 아니라 역내 안정을 위해 일정하게 경제적 지원 또는 제재를 병행하며 공격적 행동을 제지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이동선 2014, 15-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이 상처를 입고 중국이 G2 국가로서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새롭게 맞닥뜨린 구조적 변화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입장에서 북핵 문제 해결 책임을 일정 부분 중국에게 전가한 가운데 중국이 대만과 티베트, 남중국해나 센카쿠 영유권 분쟁 문제 등 역내 자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모습은 북한에게 지역 패권국을 추구하는 대륙적 강대국을 연상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이후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 대국들로부터 핵우산을 씌워주겠다는 선심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구걸한 적도 없다”(노동신문 2013/02/25)면서 “오늘의 세계는 약자가 강자의 지배에 순응하여야만 하는 불공평하고 낯강도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노동신문 2013/03/19)라고 두려움을 표출한 것이다. 3월 당전원회의시 김정은은 “전쟁 억제력을 포기했다가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노동신문 2013/04/02)면서 사실상 핵 우선 정책인 경제·핵 병진노선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2021년 1월 열린 8차 당대회 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는데, 각이한 수단의 전술핵무기 및 초대형핵탄두 증강 생산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SLBM, 고체 ICBM, 핵추진 잠수함, 수중 핵전략무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핵 포트폴리오 완성을 세부 과업으로 제시했다(노동신문 2021/01/09). 동북아의 잠재적 패권국과 역외 균형자로서 대립 중인 중국과 미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모든 체제 역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불균형적 다극(unbalanced multipolarity) 체계가 두드러지는 구조적 변화를 인식한 것은 틀림없다. 당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와 당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일

극 세계로부터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노동신문 2022/09/09),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확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되는데 맞게 대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노동신문 2023/01/01)면서 역내 정세 불안정과 세력균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은 북한의 두려움을 한층 배가시켰다.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 김정은의 연설은 북한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한미가 우리에게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약(NGC)을 가동하고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본격화한 것은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앉아 핵보유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침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이다(노동신문 2023/09/28).

실제 북한은 2022년~2023년 핵 고도화에 더욱 몰입했다. 특히 2023년에는 빠른 속도로 투발 수단 개발 노력을 보였는데, 기존 ICBM 화성-15형(2.18), 신형 다탄두 ICBM 화성-17형(3.16)에 이어 새로 개발한 고체 ICBM 화성-18형을 연달아 발사(4.13, 7.12, 12.18)하면서 미 본토 타격 능력 제고에 집중하였다. 화산-31형이라는 신형 전술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핵무기 8종을 공개(3.27)하고, 3차례의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3~4월) 및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9.6)로 지상-해상의 핵전력 2축 체계 구축에도 매진하였다. 3번째 발사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11.21)시켜 자체적인 표적 식별 능력을 확보하기도 하였다(홍민 등 2023, 60-63).

이 같은 조바심은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시정찰 능력 및 미사일 정확성 등 기술 발전은 핵전력의 열세에 있는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핵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데(Lieber 2017, 9-10), 한미는 위성자산 및 고고도 스텔스 무인정찰기들을 통해 북측 전역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대북 정밀타격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 상황이다(Lieber 2017, 42-46).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지속 증강되는 상황까지 감안 시 북한이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 내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는 통상의 핵 억제이론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태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전력 조기 격파나 지도부 대상 침수작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북한으로서는 이를 억제할 수단이 부재하므로 취약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확증보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황일도 2022, 21-25).

그 가운데서도 감시·요격이 용이한 좁은 영토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LBM 중심 전력구조를 발전시켜 생존력을 높이려고 할 텐데, SLBM의 사거리 연장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러시아로부터 어떻게든 해당 기술을 지원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1970년대 중반 프랑스가 소련을 타깃으로 SLBM 전력의 탄두소형화 및 다탄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외 균형자 미국이 기술적 조언을 은밀히 제공했던 것과 같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황일도 2022, 40-4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잠재적 지역 패권국인 중국의 태도인데, 전세계적 미중 전략경쟁 속 동북아에서 한미 견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묵인할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 등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3.1. 국내 정치적 제약과 대외 편승 전략

그간 신현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데 주류적 관점을 형성해 왔다.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그려 국제정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론으로서의 단순함을 갖추는 데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월츠와 미어샤이머조차도 이론적 한계를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들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적 속성에 관한 지식 없이는 당장에 그들이 그런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Waltz 2010, 71)거나, “강력한 플래시 라이트와 같이 캄캄한 곳을 헤쳐 나가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지만 방 구석구석을 모두 밝히지는 못한다”(Mearsheimer 2014, 11)라고 덧붙인 것이다.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단기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주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다뤄져 온 외교정책 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조류는 로즈(Gideon Rose)에 의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명명되었다.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해 대로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종속변수로 하면서도 이 두 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로 초기 현실주의 이론이 관심을 가져오던 행위자 차원의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Rose 1998, 154).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론의 간결함을 추구했지만, 필요에 따라 이론적 정교함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제정치적 힘의 차이와 그 변화를 우선 고려하면서도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인식이나 국내 자원동원 능력 등 제약을 함께 검토한 것이다(Rose 1998, 168-172). 이와 같은 구조와 단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국가 행동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그에 맞는 대응 옵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데이비드(Steven David)의 경우 제3세계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을 함께 고려하여 동맹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방위균형(omnibalancing)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세력균형 이론이 국내적 취약성을 가진 국가들이 취하는 외교정책의 동기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면 제3세계 국가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보완적 이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로서, 보다 긴급하고 위협하게 여겨지는 내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대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들은 국가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력균형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의 유화적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David 1991, 235-238). 이는 지도자를 분석 단위에 포함하고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현실주의적 가정의 경계를 확장했다.

전방위균형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지배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정치체제가 안정된 일반적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정권 유지를 위해 억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하게 되고 국내 정치 변화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대중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되어 독재자나 일부 엘리트 그룹의 득실 판단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이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David 1991, 238-242).

1970년대 이집트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경험은 전방위균형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교착 상태에 불만을 느끼며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올 것을 바라는 국내 세력들의 압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해 기존 동맹국인 소련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후견 역할을 하던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이는 미국이 소련보다 더 많은 군사지원을 해줄

수 없었음에도, 이집트의 영토 회복을 도와 사다트의 국내적 리더십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데 기인한다(David 1991, 248-251).

슈웰러(Randall Schweller)는 국제관계에서 이익을 위한 편승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에서 편승은 균형에 반대되는 의미로, 약소국이 강대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슈웰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외교·군사·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강한 국가에 편승하는 선택을 하며, 이때 큰 위협을 감수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시 연합국으로 참전해 전승국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시 독일에 편승하여 추축국이 된 근본적인 동기는 독일로부터의 안전 담보가 아닌 전리품 그 자체였다(Schweller 1994, 82-83).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s) 이론으로 보면 현상변경 시 이익에 따라 국가들을 사자(lions), 양(lambs), 자칼(jackals), 늑대(wolves)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자는 현존 국제질서에 만족하고 그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강대국으로,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쓴다. 양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늘리는데 모두 큰 비용을 들일 의지가 낮은 국가로, 주로 패권국에 유화 편승한다. 늑대는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온 약탈적 국가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현상변경을 추구한다. 자칼은 이익을 늘리는데 일정한 비용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로, 늑대나 사자 뒤를 따르며 이익을 위한 편승을 도모한다(Schweller 1994, 100-103).

이익균형 이론은 힘의 분포 자체가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 힘과 영향력이 어떠한 목표와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인데, 현상유지 국가들의 힘이 강하다면 체제가 안정될 것이고 현상변경 국가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체제가 결국 변화할 것으로 본다. 통상 현상변경 국가는 공격자로 행동하고 현상유지 국가는 위협에 맞춰 대응하는 균형자로 행동하는데,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체제가 혼란스러울 때 편승 행위는 더 활발히 일어난다(Schweller 1994, 104-107).

결국 세력균형의 변화는 편승을 불러오고 편승은 새로운 힘의 변화를 일으키며 국제관계에서의 동학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행위자들의 국내 정치와 이해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국제체제 내 국가들간 다양한 이합집산의 배경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

3.2.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현상변경 추구

북한은 약소국이면서도 권위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성격의 국가다.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반미 의식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발현시켰고 수령제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 체제를 만들어 냈다. 북한에게 있어 동북아 질서는 미국의 남한지역 강점 및 대북 압살 책동으로 대변되는 부정의한 것으로서, 반제국주의 투쟁 및 조국통일 성전을 통해 반드시 타파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가계 세습은 현상타파 정향의 유산, 곧 체제적 속성으로 각인되어 경이로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혁명적 수정주의 노선이 탄생하게 되었다(김진하 2020, 9-10).

김정은도 권력승계 이후 무력통일관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집권초 “조국통일 대업 성취를 위한 작전계획에 최종 서명했다”(노동신문 2012/08/26)며 “육해공군, 전략군 장병들이 우리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노동신문 2013/03/08)고 엄포한 것이 시작이었다. “첫 타격에 남조선 것들의 대응 의지를 꺾어 놓고 모조리 쓸어버린 후 조국통일을 경축해야 한다”(노동신문 2016/12/02)거나 “공격 명령 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노동신문 2017/08/26)거나 “총이 부족해 낙동강가에서 피눈물을 삼켰던 한을 잊은 적 없다”(노동신문

2020/07/28)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8차 당대회 시 전술핵 개발을 공개 선언한 이후에는 핵무기의 선사용(first-use)까지 위협하며 남한에 대한 공격 의지를 노골화했다. 김정은은 군단장들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에 배치 예정인 신형전술유도무기(CRBM)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에 큰 의의를 가진다”(노동신문 2022/04/17)고 강조하고,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노동신문 2022/04/26)이라며 핵 억제 목적 외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엄포했다.

언술 위협에 이어 공세적 핵교리를 구체화한 핵무력정책법을 공식 제정했는데,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지도부에 대한 공격 임박 판단 시,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필요 시,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기 초래 시 등을 나열해 핵사용 문턱을 이례적으로 낮추었다(노동신문 2022/09/09). 핵보유국으로서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영토완정에 있다는 내용도 헌법에 반영하면서 핵보유 영구화와 한반도 무력통일 결기도 분명히 했다(노동신문 2023/09/28).

이러한 흐름은 북한군 활동에서도 확인되는데, 전술핵 실전전력화 교리와 실제 남침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요 훈련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는 동부전선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서부전선에서 전술핵운용부대들이 남측 군사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으며(황일도 2023, 10), 2023년 하반기에는 총참모부 주관으로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을 진행했다(노동신문 2023/08/31). 전군 지휘훈련에서는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과 함께 남한의 군사지휘거점, 군항과 작전비행장,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핵) 타격을 가하는 방향에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2023년 말 당전원회의 시 “남북 = 적대적 교전국 관계”임을 선포하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노동신문 2023/12/31)을 주문했는데,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실제 전선을 만들기 위한 기도를 보다 본격화했다. “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해 대한민국을 괴멸시킬 것”(노동신문 2024/01/16)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김정은 주재 하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발사(2월), 남침 시나리오 시연(3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4월)이 연이어 진행됐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에서 우리의 해상 경계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을 강조해 서해 NLL 수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예고했고(노동신문 2024/02/15), 특수부대의 GP 습격(3.6) →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3.7) → 탱크부대의 서울 진격(3.13) → 공수부대의 후방 침투(3.15) → 군사시설 전술핵 타격(3.18) 등 전시 작전 점검 모습도 보였으며(연합뉴스 2024/03/19),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시스템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초대형방사포병 부대들을 운용하는 훈련도 진행하여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발령 하에 모의 핵탄두가 탑재된 포 4발을 일제 사격하기도 하였다(노동신문 2024/04/23).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 태도는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구조적 차원의 요인과 혁명적 수정주의 국가라는 행위자 차원의 요인이 결합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슈웰러가 구분한 자갈형의 현상변경 추구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힘이 열세이기 때문에 늑대형과 같이 직접 패권국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 변동 시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 기회를 활용하려 들 수 있다. 전환기에 이익을 위한 편승을 시도하고 동맹연루(chain-ganging)를 기획하여 주저하는 강대국을 분쟁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소 양극체제 질서가 자리 잡기 이전에도 능란한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며 소련 및 중국을 북한 주도의 한반도 무력통일 계획에 끌어들이고 있다(김진하 2020, 175-177).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 반제자주를 제1국책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을 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도 함께 주창했다. “이중기준으로 세계 평화·안정을 무참히 유린하는 미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선동한 것이다(노동신문 2024/01/16). 이어 김성남 당국제부장이 방중하여 국제정세와 관련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조하기도 했다(노동신문 2024/03/25). 핵 고도화로 한층 더 대담해진 북한은 유럽과 중동 등에 미 전력이 분산되고, 역내 미 영향력을 밀어내려는 중국의 도전이 거세질수록 갈등과 긴장 구도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회주의적 편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칼형의 북한은 사자형인 미국에 편승할 여지도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핵개발 이후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경험한 바 있는 북한은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미국에 편승하려는 구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2007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심이 있는지 물으면서 “미국이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제한적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함택영 2014, 281-282).

김정은 역시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안보 대 안보 거래를 추진했는데, 2018년 방북한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에게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방어하는데 미군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드러내 보인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01/25).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대남 우위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중국에 편승해서 미국과 균형을 이루든 미국에 편승해서 중국과 균형을 이루든 개의치 않는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이후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입을 통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의사를 표했다. “북미 사이의 역학적·도덕적 평형이 유지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조선중앙통신 2020/03/22)거나 “우리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 보는 게 더 쉽고 유익할 것”(조선중앙통신 2020/07/10)이라며 전략적 제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장성욱 2021, 67-68). 바이든 정부 시기에도 “미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해 전방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조선중앙통신 2023/07/17)는 등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김정은이 고체 ICBM 발사차량 공장 방문 시 “2025년까지 시달한 군수생산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핵무력은 비상이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노동신문 2024/05/18)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차기 미 행정부와 새로운 지위에서 한미동맹 형해화나 유엔사 해체 등을 염두에 두고 구축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행동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내부 위협 요인이다. 한미에 대한 선부른 핵 사용 위협은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주목할 지점이 있는데, 첫째, 김정은은 건강이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몸무게는 140kg으로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연합뉴스 2023/05/31). 통치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감안 시 이는 정권의 최대 리스크다.

둘째, 후계 구도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붙이며 딸 김주애를 후계자처럼 예우하고 있지만(노동신문 2024/03/16), 2013년생이라는 어린 나이를 봤을 때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경제난과 사회불안이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간부들의 정책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고(노동신문 2024/09/10),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

고 시위까지 벌였다(연합뉴스 2024/02/20). 핵 집착과 자력갱생 노선 장기화에 따라 핵심층 내 불만이 점증하고 체제 통제력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역시 근본적인 체제 개혁 없이 계획경제 강화와 사상무장 캠페인에만 의존해서는 이 난관을 타개하지 못할 것임을 알 것이다. 자신의 건강 이상이나 엘리트층의 동요가 있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후계자의 업적을 만들어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물려주려면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김정은의 조바심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미국 또는 중국에 편승하기 위한 틈을 만들려 할 것이다.

4.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본 북한

4.1. 국가 간 권력 투쟁과 권위제고 정책

신현실주의 이론은 강대국 위주의 장기적 관점 탓에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짧은 기간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서 일관된 예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가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단일한 행위자라는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체계적 접근의 과도한 거리 두기를 피할 수 있는 실용적 이론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이런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고 평가되는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주장, 곧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이 새삼 주목된다. 모겐소는 신현실주의 이론과는 달리 국제관계에서 국가라는 행위자가 펼치는 외교정책 자체에 보다 큰 무게를 두면서도,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깊게 관심을 기울인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나 정부 성격 등 국내적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았다. 그는 국제정치가 인간 본성에 근거한다고 가정하고, 국가들이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Morgenthau 2005, 4-10). 그가 볼 때 국가들은 상대적 힘이 커질 때 확장적 외교정책을 택하며, 형세에 따라 현상유지 국가가 될 수도, 현상변경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모겐소에게 있어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정치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정치권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런 이유에서,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단순한 영향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무력과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관계에서 A국이 B국에 권력을 가졌다는 말은 A국이 B국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B국의 어떤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뜻이 된다(Morgenthau 2005, 29-34).

이를 전제로 할 때 국가들의 권력투쟁 방식은 크게 유지(keep), 확장(increase), 과시(demonstrate) 등 세 가지 형태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상유지 정책이다. 권력을 지키려 할 뿐 현재 권력 분포가 변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둘째, 현상변경 정책이다. 더 큰 권력을 얻어 권력 구도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 셋째, 권위제고 정책(policy of prestige)이다. 국가의 목표가 현상유지든, 현상변경이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한다(Morgenthau 2005, 50-51, 66).

이 가운데 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권위제고 정책인데, 주로 군사력 과시를 통해 한 국가가 실제로 가진 힘 혹은 갖기 원하는 힘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 측 동맹국들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적대 세력의 협력이 약화되도록 하며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해당국 외교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Morgenthau 2005, 89-92).

또한 연장선상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권력이 심리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정책이나 현상변경 정책 모두 도덕적 명분과 법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쓴다. 통상 현상유지 국가는 평화와 실정법을 내세우고 현상변경 국가는 공정과 자연법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다(Morgenthau 2005, 100-103). 이는 일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권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 요소로 상정한 가운데서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여론이나 관습과 같은 도덕적 제약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을 뜻한다.

현실주의라는 이름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다고 평가되는 카(E. H. Carr)의 경우 훗날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 이론이라고 불릴 만큼 권력과 도덕을 포괄해 국제정치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를 이기적이며 사회적인 두 가지 인간 본성 위에 건설된 것으로 파악하며, 권력과 도덕을 국가의 불가결한 두 가지 속성으로 규정한 것이다(Carr 1964, 95-96).

정치권력에 관해서도 군사력·경제력과 더불어 생각에 대한 지배를 중요 요소로 꼽았다. 다수의 생각, 즉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propaganda)이 심리적 전쟁 수단이자 중요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왔다고 본 것이다. 소련은 코민테른이라는 대규모의 상설 선전기구를 창설하여 공산주의라는 국제적 독트린을 전파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얻었고(Carr 1964, 135-138),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현상유지 국가들의 목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Carr 1964, 221-222).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규율하는 모종의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가장 명백한 도덕률 중 하나는 불필요한 민간인의 사망을 초래하지 말고 소수 인종과 난민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도 주권 국가의 의무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강제력이 없는 조약을 위반하면서도 조약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약위반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노력한다(Carr 1964, 198-201).

현상변경에 대한 요구 역시 권력과 도덕이란 두 측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데(Carr 1964, 264), 결국 모든 국가들은 권위제고 노력 및 도덕적 원칙의 흥정, 권력 범위의 확장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유리한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권력 배분 상태의 조정은 그 국가에 유리하게 역전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4.2.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국제적 인정 노력

북한 행보의 경향과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루어진 행동과 그를 뒷받침하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무력통일 레토릭은 지금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수준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인 외교정책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현상유지를 위한 균형 정책인지, 현상변경을 염두에 둔 편승 정책인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꿈꾸는 미래 목표와 현재 능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모겐소가 권력투쟁의 세 번째 형태로 꼽은 권위제고 정책이 북한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게 권위제고 정책은 현상유지나 현상변경 정책 모두를 뒷받침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힘을 과시하여 우선적으로 한미를 억제하여 생존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정세 주도권을 기대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2021년 국방발전전략대회 「자위-2021」에서 연설한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노동신문 2021/10/12)는 문장은 전략적 선택지를 열어 놓은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역 핵보유국으로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이며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제”(노동신문 2022/09/09)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일단 보유한 핵은 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노동신문 2023/09/28)고 역설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과거 미국이 전략적 이해와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했던 전례가 재연되기를 기대 중일 것이다(최아진 2020, 183-194).

군사력 과시는 권위제고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북한은 허세(bluff)를 통해 국력을 과장하고 그에 맞는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열병식인데, 하노이 노딜에 따른 대미 정면돌파전 선언 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더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0.9회이던 것이 2020~2023년 1.75회로 2배 증가했다. 당창건 75주년(2020.10.10)부터는 야간 에어쇼와 불꽃놀이를 병행하며 연출 비용도 대폭 높였고, 2023년에는 인민군 창건(2.8), 정전협정(7.27), 정권수립(9.9) 기념일에 맞춰 3회나 개최했다(장양규 2024, 36, 53).

해군력을 부각하는 것 역시 최근 북한이 특히 신경 써왔던 부분이다. 김정은은 전술핵미사일 발사관을 갖춘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서 “전술핵잠수함은 선진해양강국 건설 대업의 첫 산아로,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핵잠수함화하고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주창하였다(노동신문 2023/09/08). 2024년 초 동해 신포조선소와 서해 남포조선소를 방문하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수중-해상 합점 확보 프로젝트의 수행을 독려하는 중이다(노동신문 2024/01/29; 2024/02/02). 그에 앞서서는 국방성 대변인이 새로 개발 중인 핵무인수중공격정을 시험발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을 억제하기 위한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조선중앙통신 2024/01/19).

이는 해군력을 해상 경계나 연안 방어 수준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양해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위한 것으로 북한이 보유한 능력과는 괴리가 크다. 한미일 해상 연합전력에 대한 절대적 열세 속 미 전략자산 견제 및 러·중과의 군사 공조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존재감을 키워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위협을 실재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사시 미국 대도시를 향한 전략핵 공격과 한반도 전장에서 전술핵 사용과 관련한 실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심하는 중이다. 특히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외부 평가에 상당히 민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화성-17형 고각발사 이후 김여정은 “괴뢰 군 깡패들이나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몇 년째 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검종되지 않았다고 물고 늘어지는데, 곧 해보면 알게 될 일이니 개나발들을 작작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선중앙통신 2022/12/20).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역내용 전술핵의 경우 기존의 포병전력 지휘체계와 통합하여 실전전력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위하는 데 주력 중이다.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방사포를 인도받아 사격(노동신문 2023/01/01)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핵반격 종합전술훈련 시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을 공개(노동신문 2023/03/20)하는 등 재래식과 핵탄두 모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무기 체계의 모호성(ambiguity)을 부각하는 연출을 통해 위협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장 지휘관들이 일정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독점하는 중앙집중형 지휘통제 하에서는 딜레마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핵탄두가 작전배치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초대형방사포부대들이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하에서 실시한 훈련에서도 여전히 김정은 직속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노동신문 2024/04/23).

또한 핵무력정책법상에는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나(노동신문 2022/09/09), 전술핵 운용 훈련은 여전히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밀암호지령문 발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노동신문 2024/05/31). 이는 대외 선전 필요성과 내부 운용 현실 사이의 괴리 속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여전히 미비함을 시사한다.

북한은 국제법을 정치화하여 유리한 여론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법률전(lawfare)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 외무상 최선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10조에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랐으므로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상기시킨다”(조선중앙통신 2023/04/21)며 합법적 NPT 탈퇴를 강변하는 가운데, 핵정책 헌법 명기 이후에는 “핵주권 수호의 강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것으로, 비핵화 강요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위헌 행위로 간주될 것”(조선중앙통신 2023/09/30)이라며 국내법을 근거로 타협불가함을 시위하는 중이다. 우주개발국 부국장이 우주조약을 근거로 정찰위성 발사가 정당함을 주장하고(조선중앙통신 2023/03/06), 김여정과 군대가 나서 해양법협약을 토대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군 정찰 활동을 견제하기도 한다(조선중앙통신 2023/07/10; 2023/07/13).

한미의 이중성을 부각하는 데도 집중한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이 곧 핵전파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조선중앙통신 2023/08/05), 김여정이나 주중 대사가 나서 우크라이나-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자결권 침해로 규정하여 진영대결 조장에 활용하는 가운데(조선중앙통신 2023/01/27; 2023/08/24), 유엔 안보리의 형해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개편 제안 속 유엔 대사가 “미국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발전 도상국의 대표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연합뉴스 2023/09/27).

한국 사회 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도 열심이다. 김여정은 “그래도 문재인 때는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조선중앙통신 2022/11/22)·“돌이켜보면 문재인이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24/01/02)며 ‘전쟁 대 평화’ 구도를 조성하고, “남조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조선중앙통신 2022/11/22)·“세상은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조선중앙통신 2024/07/08)는 등 사실상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을 통해 국제 제재·비확산 레짐을 형해화하고 북한 비핵화 비판론을 확산시킨 후 중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핵보유 묵인을 받아내는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군사적 허세와 실제 국력 사이의 갭을 줄여 나가면서 다양한 도발·외교 카드와 인지전을 조합해 하루빨리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키우고 도덕적 원칙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5. 나오는 글

신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라는 세 가지 이론적 틀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았다. 각기 다른 시각과 논리가 있었으며 단 하나의 이론으로 북한 행동의 성격을 재단하기는 어려웠다. 과거 모겐소가 현상변경 국가에게 맹목적 유화 정책을 펴는 것이나 현상유지 국가에 대해 공포감을 조장하며 과잉 대응하는 것 모두 치명적 실수라고 강조했던 것을 상기했을 때 (Morgenthau 2005, 79), 판단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가령,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북한이 생존을 최우선하며 현상유지를 희망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군비경쟁의 늪에 빠져 있는 북한을 궁지로 몰기보다 종전선언과 경제협력 제안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북한이 현상변경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봉쇄 정책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예방적 공격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 물론 누구도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지는 않겠지만, 무엇인가 하나의 관점만을 선택하고 고집할 위험성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함께 볼 경우 북한을 현상유지(방어적) 또는 현상변경(공격적) 국가로 선불리 단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 한계로 균형 정책 유지도 어렵고 한국에 비해 미·중에 제공할 유인 부족으로 편승 정책 추진도 어려워 우선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권위제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말 김영정이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묶어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망발을 내뱉는 미국의 버릇나쁜 개들”이라고 막말 비난(연합뉴스 2024/10/22)한 것 역시 러시아와 동렬에 서서 ‘핵보유국 vs 비핵국’ 구도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ICBM 재진입·다탄두 기술이나 핵추진 잠수함·SLBM 기술 이전을 통해 대미 확증보복 능력 확보에 계속 몰두할 것이고, 북러 밀착을 고리로 이란·니카라과 등과 반미 공동전선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어떻게든 진영 대결에 연루시키기 위해 부심할 것이다. 물론 그 속에서 끊임없는 국제 여론전을 벌이며 한반도 정세 긴장 완화나 남북자 문제 해결을 구실로 물밑에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을 모색해 나갈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점은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삼은 강도 높은 핵 공갈(nuclear blackmail)과 함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중동·대만 해협에 이은 4번째 전선을 위협하며 핵군축으로의 프레임 전환에 힘을 쏟을 것인데, 미국이나 중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북한 핵동결이나 핵군비통제 조치를 빌미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초 미국 내에서 칼린·헤커와 같은 대북 협상론자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북핵의 인정 및 대화 재개를 주문(연합뉴스 2024/01/24)하고, NSC·국무부 고위관료들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비핵화 과정의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VOA 2024/05/01)했던 것은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원칙적이고 단합된 태도로 북한의 핵 강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과시와 실제 공격 감행 징후를 판별해 나가면서 그 역량과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북한의 근본적인 쟁점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한미 안보협력을 핵심축으로 우방국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한 세력균형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변화 압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관여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정교한 제재·보상 프레임 마련하여 도덕적 명분을 갖고 국제사회가 북한 변화 유도에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만의 자구책도 고민해야 한다.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역량을 증대하는 동시에 국내 원자력 부문의 획기적 발전 등 핵 억제력 강화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 옵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힘의 우위를 충분히 인식시키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 제안을 통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일정한 출구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건영, 신옥희(편).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2] 황지환.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김태형 등.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핵 보유 이후 국가행동의 변화.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3] 안경모. 북한의 대외전략 분석(2008년-2016년): '편승'에서 '균형'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2권 제4호. 2016.
- [4]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2023.
- [5] 정성윤, 김민성.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KINU 연구총서, 23-16. 2023.
- [6] 김진하 등.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 [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ess. 2010.
- [8]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W.W. Norton & Company. 2014.
- [9] Kang, David C.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3. 1995.
- [10] Oberdorfer, Don & Carlin, Robert. 이종길·양은미역. The Two Koreas: 두 개의 한국. 길산. 2014.
- [11] 이용준.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올아카데미. 2018.
- [12] 이종주.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1991-2016):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적 내부균형'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3] 이동선. 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 [14] 홍민 등.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KINU 연구총서, 23-26. 2023.
- [15] Lieber, Keir A & Press, Daryl G.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2017.
- [16]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2-05. 2022.
- [17] Rose, Gideon.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Vol. 51, No. 1. 1998.
- [18] David, Steven R.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No. 2. 1991.
- [19]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 [20]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국방연구, 제63권 제1호. 2020.
- [21] 황일도.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3-12. 2023.
- [22] 함택영.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2호. 2014.
- [23] 장성욱.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제27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연구자료집. 2021.
- [24] Morgenthau, Hans J et al.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7th Ed. McGraw-Hill. 2005.
- [25] Carr, Edward Hallett.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rper Perennial. 1964.
- [26] 최아진.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김태형 등.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핵 보유 이후 국가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0.

[27] 장양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 변화와 확대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40권 제1호. 2024.